



국회 내년 예산 심사 앞두고 증액 총력

도, 기재부 설득 작업 본격
김관영 지사, 예산실 찾아
연이어 면담... 미래산업
새만금 등 핵심사업 건의

전북특별자치도가 2026년 정부 예산에 대한 국회 심사를 앞두고 국가예산 증액을 극대화하기 위한 기획재정부 설득 작업에 본격 나섰다.

김관영 도지사는 22일 정부 세종청사를 방문해 기재부 예산실 간부들과 연이어 면담하며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주요 현안사업을 직접 건의했다.

이번 활동은 국회 예산심사 단계에서 증액하려면 정부 동의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고려해, 예산 증액 결정권을 쥔 기재부 예산실 핵심 인사를 직접 설득하기 위한 전략적 행보로 추진됐다.

이날 김 지사는 경제예산심의관을 비롯해 고용예산과장, 국토교통예산과장, 산업중소벤처예산과장, 연구개발예산과장, 정보통신예산과장 등을 차례로 만나 AI 등 미래산업, 농생명산업, 새만금 개발사업 등 20여 개 사업의 예산 반영을 요청했다.

AI 등 미래산업 전환을 위해 △새만금 RE 100산단 구축지원 △협업지능 피지컬AI 기반 SW플랫폼 연구개발 생태계 조성 △전북 AI 한글화 교육센터



전국장애인체전 전북선수단 결단식

전북선수단을 응원하며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구축 △AI기반 차세대 엑소좀 기술 및 표준화 개발(R&D) △방사선 기반 소재 장비 기술 혁신화(R&D) △국가 RI-ADME 구축·활용 지원사업(R&D) △디지털트윈기반 사용후배터리 재자원화 최적화센터 구축(R&D) △첨단드론스포트츠 활성화 지원센터 구축 등을 제시했다.

농생명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동물용의약품 임상시험센터 △팻푸드 소재 산업화 플랫폼 구축 △사료작물 종자 생산기지 구축 △농업로

봇 핵심기술 개발을 위한 시설 농업 로봇 실증기반 구축 △농업기계 디지털 전환형 개방형 A-SW 오픈소스 및 협력개발 서비스 플랫폼 구축(R&D) 등을 건의했다.

새만금 개발과 관련해서는 △새만금 수목원 조성 △새만금 국가정원 조성 △가력항 국가어항 지정 및 조기 개발 △새만금 상수도 간선관로 건설 등의 증액 필요성을 집중 설명했다.

아울러 △소상공인연수원 △일민국도건설(임실성수-진안백운, 임실청운-

임실, 부안진서운호-석포) △KTX익산역 확장 및 선상주차장 조성 등 지역 균형발전과 교통 인프라 확충 사업의 예산 반영도 제안했다.

김관영 도지사는 "기재부 설득은 정부예산의 핵심 관문이다. 논리와 근거를 바탕으로 설득해 국회 단계에서 전북 핵심사업이 최대한 증액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도와 시군, 정치권이 '일타'로 힘을 모아 국가예산 확보의 성과를 반드시 이루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우리 국적선사 운송 인센티브제도 필요”

민주 이원택 의원, “국가 핵심에너지 수입 과정 외국선사가 운송하게 될 경우 안보 등에 큰 타격”

전북특별자치도 지사에 출사표를 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군산·김제·부안)은 22일 LNG, 원유, 철광석 등은 국가 핵심에너지로 분류된 가운데 수입과정에서 대한민국 국적선사가 운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외국선사가 운송하게 되면 유사시 외국선박은 운송을 중단하게 될 것이고 이는 우리나라의 안보와 산업경제에 큰 타격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22일 이원택 의원이 한국가스공사와 한국해양진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2025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가스공사가 수입하는 LNG 운송 국적선사 적취율(국내선박이 핵심에너지를 운송하는 비율)이 2020년 52.8%에서 2037년 0%가 되어, 국가 핵심에너지인 LNG운송이 100% 외국선사가 도맡게 되었다. 따라서 10년 후가 되면 한국가스공사가 수입하는 LNG 운송을 100% 외국선박이 맡게되어, 국가 안보와 산업경제에 큰 파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원택 의원은 “가스공사가 경제적 이익과 경영평가의 불이익을 모면하기 위해 국가안보와 직결되어 있는 LNG운송을 외국선사에 맡기고 있다”며 “DES 계약을 다시 FOB 계약으로 전환하여 국적선사의 적취율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



했다.

이어 이 의원은 “가스공사가 경제적 이익 때문에 DES를 하는 것이라면, 재정당국은 FOB 계약 시 손실분을 재정에서 지원하는 ‘국적선사 운송 인센티브제도’를 신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가스공사가 국적선사와 FOB 장기계약을 하면, 국적선사는 국내 조선소에 LNG선 발주를 하게 되어 국내 기간산업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게 된다”며, “산업부·해수부·가스공사·국적선사 간 LNG 해상운송 협의체를 구성하여 LNG 국적선사 적취율을 상향해야 한다”고 밝혔다.

가스공사가 LNG를 수입할 때 국내선박을 이용하는 FOB 계약((Free on Board: 본선인도조건, LNG운송은 수입자 책임) 대신에 외국선박을 이용하는 DES 계약((Delivered Ex-Ship: 착선인도조건, LNG 운송은 판매자 책임)을 해왔다.

가스공사가 DES 계약을 하는 이유는 DES가 FOB에 비해 운임단가가 저렴하고(FOB가 104% 비쌌) 국내선사와 FOB 장기계약을 할 경우 가스공사가 선박 보증에 따른 부채를 상으로 공기업 경영평가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가스공사의 경제적 이익과 경영평가의 불이익을 모면하기 위해서 국적선사를 외면하고 국가안보와 직결되어 있는 국가핵심에너지인 LNG 운송을 외국선사에게 모두 맡기게 된 꼴이라는 주장이다.

/권희성 기자

‘사회서비스 산업 신성장동력 제시’

도·전북대 공동주최 ‘사회서비스 일자리+ 산업박람회’
600여개 전시·체험 부스 운영... 미래형 복지서비스 선봬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대학교가 공동 주최하는 ‘제2회 사회서비스 일자리+ 산업박람회’가 22일부터 23일까지 양일간 전주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된다.

이번 박람회는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성장과 산업화를 촉진하고, 첨단기술을 접목한 미래형 복지산업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지난해 첫 개최 이후 올해는 전북대학교와의 공동 주최를 통해 전문성과 실효성을 한층 강화했다.

이번 행사는 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한국지역사회복지협회 전북지

부, 전북특별자치도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한국시니어클럽협회 전북지회, 한국장애인표준사업협회,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전북지사 등 6개 기관이 공동주관으로 참여하며 ‘사회서비스 일자리, 함께 성장!’이라는 슬로건 아래, 사회서비스 산업이 연대와 협력을 통해 함께 성장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박람회장에는 60여 개의 전시·홍보·체험 부스가 마련되어, AI 돌봄서비스, 스마트 헬스케어 등 복지와 기술이 융합된 혁신형 사회서비스 사례를 직접 체험할 수 있다. 또한 노인,



‘제2회 사회서비스 일자리+ 산업박람회’ 개막식이 22일 전주실내체육관에서 열린 가운데,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장애인, 중장년 등 다양한 구직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일자리상당’ 부스를 통해 실질적인 취업정보 제공과 맞춤형 컨설팅 서비스도 지원한다.

노홍석 전북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는 “전북은 사회서비스 산업을 선도

하는 지역으로, 공공과 민간이 협력하는 다양한 모델을 발굴하고 있다”면서, “이번 박람회를 계기로 사회서비스가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 기반 산업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새만금개발공사, AI 이미지 공모전 성료

새만금개발공사(사장 나경균, 이하 공사)가 주최한 ‘내가 상상하는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AI 이미지 공모전이 전국에서 206점의 작품이 접수되는 등 높은 관심 속에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심사 결과 △최우수상은 김준영씨의

‘새로운 빛과 함께하는 지속 가능한 친환경 스마트 수변도시’, △우수상은 김진민씨의 ‘AI와 물의 교향곡, 새만금과 서동연씨의 ‘물과 빛의 스마트링, 새만금’이 각각 선정됐다. 이외에도 장려상 3명과 참가상 10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만호 기자

